

EV 둔화 속 ESS 입찰 ‘사활’… K-배터리, 물량·수익성 총력

ESS 2차입찰 540MW 사업비 1조대
가격비중 축소 비가격 평가비중 확대
계통연계·안전성·국산화 핵심 변수

삼성SDI NCA 각형 고수 안전성 강조
LG·SK LFP전환 저단가·국산화 맞붙

전기차(EV) 시장 둔화로 실적 부담이 커진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제2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둘러싸고 물량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과 관련한 입찰제안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감한다. 사업자 선정은 2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2차 ESS 사업 규모는 총 540MW로, 사업비는 약 1조 원대로 추산된다. 준공 기한은 2027년 12월이다.

이번 입찰의 핵심 변수는 평가 기준 변화다. 2회차 입찰에서는 가격 평가 비중이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졌고,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비가격 평가 비중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계통 연계성, 산업·경제 기여도, 화재 및 설비 안전성 항목의 배점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기술 선택과 국내 생산 기반, 공급 안정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1회차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비가격 부문에서 강점을 앞세워 전체 물량의 80%가량을 확보했다. 삼원계(NCA) 각형 배터리의 안정성과 울산공장 생산에 따른 국산화 기여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

고, 가격 측면에서도 사업 특성에 맞춘 입찰가 설정과 컨소시엄 연계를 통한 비용 절감 전략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물량은 LG에너지솔루션이 수주했으며, SK온은 수주 실적을 내지 못했다.

삼성SDI는 이번 2회차 입찰에서도 NCA 각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NCA 각형 배터리는 내구성이 높고 화재 확산 억제에 유리하

다는 평가를 받는다. 셀 이상 발생 시 인접 셀로 열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No TP(열전파 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일체형 ESS 솔루션인 ‘삼성 배터리 박스(SBB)’ 역시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배터리와 안전장치, 공조 설비를 하나로 통합한 구조로 설치와 운송 효율을 높였고 화재 안전성 강화와 비용 절감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기술대상’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입찰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와 높은 화재 안전성을 강점으로 삼아, 생산 거점을 국내로 전환하며 산업·경제 기여도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에 연 1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LFP 배터리 양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화 설비 없이도 화재 전이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적용해 ESS 안전성도

강화했다.

SK온은 충남 서산 공장 내 일부 라인을 연 3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이는 국내 ESS용 LFP 배터리 가운데 최대 수준의 생산능력이다. 물량 대응력을 앞세워 입찰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SK온과 SK이노베이션은 바나듐이온배터리(VIB) 기반 ESS 전문기업 스탠다에너지와 협력해 ESS 안전성 차별화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성과가 향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ESS 사업 전략과 생산 가동률, 사업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가장 치열한 경쟁”이라며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 ESS 물량 확보 여부가 향후 생산 가동률과 사업 지속성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입찰에서 사전 전망과 다른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번 2차 역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메이커스페이스 ‘제조전문형’ 모델 도입

중기부, 시제품부터 초도양산 지원
제조기업 참여설계·공정·원가검증
주관기관 8→13곳 2월 3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제품부터 초도양산까지 지원하는 2026년 제조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를 13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메이커스페이스는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장비를 활용해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역할에 집중해 왔지만 많은 스타트업이 시제품 이후 양산 설계, 제품 인증 등 생산 전환 단계에서 벽에 막히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2026년부터 메이커스페이스에 ‘제조전문형 모델’을 도입해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기능을 재설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메이커스페이스는 시제품 제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초도양산 가능성까지 함께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시제품 완성 이후 양산 단계는 창업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제조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제조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이 함께 참여해 설계 검증, 공정 설계, 원가 분석, 양산성 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양산까지 한 번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스타트업은 시제품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산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메이커스페이스 주관기관을 전년도 8개에서 올해 13개 규모로 확대해 모집할 계획이다. 1000㎡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문 장비·인력을 보유한 기관(기업)은 시제품 제작, 양산 설계, 제품인증, 초도양산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단순 장비 제공형 메이커 공간이 아니라 전문기업의 공정·양산 노하우와 메이커스페이스의 창작·실험 기능을 결합한 지역 제조전문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정원 창업정책관은 “메이커스페이스는 단순한 메이킹 공간이 아니라 전문기업과 함께 제품화·초도양산까지 책임지는 제조창업 거점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실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조창업 생태계를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웅진프리드라이프, 상조서비스 전면 개편

‘웅진프리드360, 450, 540’ 선택

상조 업계 1위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웅진그룹 편입 후 처음으로 상조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5년 만에 상조라인업을 새롭게 정비한 ‘웅진프리드360, 450, 54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웅진프리드’ 시리즈는 웅진그룹 편입 후 처음으로 ‘웅진’ 브랜드를 정식으로 붙인 상조 서비스다. 웅진그룹의 신뢰와 프리드라이프의 장래 전문성이 결합한 상품으로 의전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웅진프리드360’은 합리적인 가격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담은 에센셜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2명, 수의, 상복 8벌을 제공한다. ‘웅진프리드450’은 서비스와 품질의 균형을 갖춘 스탠다드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4명, 수 명품 수의, 상복 10벌을 제공하며 의전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



‘웅진프리드 360, 450, 540’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 ‘웅진프리드540’은 최상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5명, 특 명품 수의, 상복 20벌, 꽃제단 지원금 30만원을 제공한다.

상조 가입 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케어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 리조트, 반려동물 돌봄, 홈케어 등을 다양한 서비스를 가입 즉시 멤버십 우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中企公제기금 가입업체 대상 ‘이차보전 대출’ 시행

중기중앙회, 지자체와 이차보전 협약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 1~3% 지원
공제기금 대출금리 최저 2.6% 가능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교양, 춘천, 원주, 천안, 포천)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

1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

업으로, 2025년에는 3100개 업체가 2540억원의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산방지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5.6%의 금리로 신용대출(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는 경우 최저 2.6%까지 금

리 부담이 낮아져 가입업체의 만족도가 높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사이버 침해 정황 신속대응

KISA 신고·원인 조사 착수

교원그룹이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즉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 고객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다. 12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내부 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교원측은 사고 인지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관련 수사 기관에 침

해 정황을 신고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외부 전문 보안 업체와 협조해 사고 원인 파악 및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객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그룹은 이번 사고의 원인 및 피해 정도 및 복구 상황 등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